

1994

여성계

94년 한해동안 여성계가 가장 중점을 기울인 두가지 줄기는 정치 참여 활성화와 사회 진출 확대를 위한 각종 장치 마련이었다.

내년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여성계는 생활정치를 실현할 여성 후보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20% 후보공천 촉구 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여성특위의 발족은 이러한 여성계의 행보에 박차를 가해 주었다. 또 군복무 가산제를 축소 조정 하도록 했는가 하면 용모로 차별 채용하는 기업체를 고발했다. 최초의 여성시장, 구청장 탄생, 지역구 여성의원 탄생 등 굵직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여성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다.

세계가정의 해를 넘기면서 평등부부상이 제정되는 등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 것도 94년에 여성계가 일구어 낸 큰 열매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성희롱 교수에 대해 3천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져 여성들의 사회 생활에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성희롱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한 것도 획기적인 일로 기록됐다. 본지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올해 여성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1 지자제 선거 준비 본격화

20%할당제 여성연대 발족
후보자 선정 물밑작업 활발



▲올 한해 여성계는 20%여성후보 할당제 도입을 위해 연대하고 후보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내년 지자제 선거 현장을 향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올 한해 동안 여성계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활동은 내년 지자제 선거에 대비해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었다. 민자, 민주 양당은 물론이고 기존에 여성정치 활성화에 주력해 온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등은 후보자 발굴, 자원봉사자 교육 등 선거전을 위한 총체적 작업을 수행해 왔다. 연말에는 이들 단체들이 발굴한 후보를 중심으로 집중 선거전략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역시 올 3월 여성대회를 통해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정한 뒤 지속적인 지자제 대비 작업을 해 왔고 연말에는 선거 출마자를 확정, 실천 연습에 들어갔다.

특히 정치관계법의 개정(4월)과 국회 내 여성특별위원회의 발족(6월)으로 여성 정치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여성계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20%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창립(7월)해 내부 응집력을 한층 강화 시켰다.

지방에서도 중앙 여성계의 활발한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부산에서 '여성정치 참여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전남, 전북지역, 경기도지역 등에서 후보자를 육성하는 등 정치 현장을 향한 물밑 작업을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다.

2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여성관련법 제·개정에 역점, 13명의 남성의원 활동

국회에 여성정책을 전담할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정 민주당 전국구)'가 지난 6월 28일 신설됐다. 이는 2년여 동안 61개 여성단체의 청원, 여성의원들의 발의, 여의의원 38명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낸 결과다. 여성특위가 신설되자 각 단체는 축하식을 가지고 '현정 사상 처음있는 경사'로 평가했고, 여성계는 오랜 숙원사업 하나가 해결됐으며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했다.

여성특위는 동성동본 금혼제지, 남녀고용평등법, 윤락행위방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등 제도적인 법률의 제·개정작업에 역점을 두고 활동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산하에



▲여성특위의 탄생을 헌정 이래 최고의 낭보로 평가한 여성계는 여성특위가 대정부 여성의권 수렴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전담부서가 없는 것이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위원의 경우 여야를 떠난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김덕룡, 손학규, 조세형, 김원웅 등 13명의 남성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여성특위는 몇개월 앞으로 다가온 4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여성후보 20% 할당제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성희롱 3천만원 지급 판결

서울대 우조교 3천만원 손해 배상 판결,
범위·책임소재 논란 계속



▲직장에서의 성적인 불쾌한 언행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전 사회에 일깨워 준 우조교 사건으로 여성계는 직장성희롱을 노동권 침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사회의 통념이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판결로 평가된 성희롱 재판은 현재 신교측의 항소로 5차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

1차 판결 후 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우조교에 대해 정당하고 용기있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했고, 64.4%가 직장내 성희롱 규제법률 제정이 절실하다고 답해, 성희롱 범위와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첫 여성시장, 구청장 탄생

전재희 광명시장, 이현희 대구 남구청장
중간 관리급 여성도 늘어

지난 4월 16일 경기도 광명시장에 전재희(45) 전 노동부 직

업훈련국장, 대구직할시 남구청장에 이현희(52) 전 대구직할시 가정복지국장이 임명돼 헌정 이래 최초의 여성기관장이 배출됐다. 당시 여성계는 공직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온 두사람을 시장직, 구청장직에 임명한 것에 대해 적절한 인사로 크게 환영했다.

전 시장은 취임 직후 한 "35만 광명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장을 펼치겠다"는 약속대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친근하면서도 믿음직한 시장'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구청장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는 이 구청장 역시 섬세하면서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기관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중간 관리직급 여성 인력의 배출도 크게 늘어 4월에는 90년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김선미(27), 김은숙(31), 박낙원(24) 씨가 차장으로 승급되는 낭보가 전해 졌으며,

7월에는 서울 청량리 경찰서 강력 2반장에 박송희(25) 경위가 임명돼 강력계 여성 관리자의 새 지평을 열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에 사상 처음으로 5명의 여성경위가 선발됐는가 하면, 국회도서관의 신용자 분석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 국회 첫 국장급 여성으로 기록됐다.



▲전재희 광명시장



▲이현희 대구시 남구청장

5 지역구 여성의원 대 잇다

현경자 의원
12대 이후 첫 지역구 여성의원 배출



▲12대 이후 풀린 지역구 여성의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이우정 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 여성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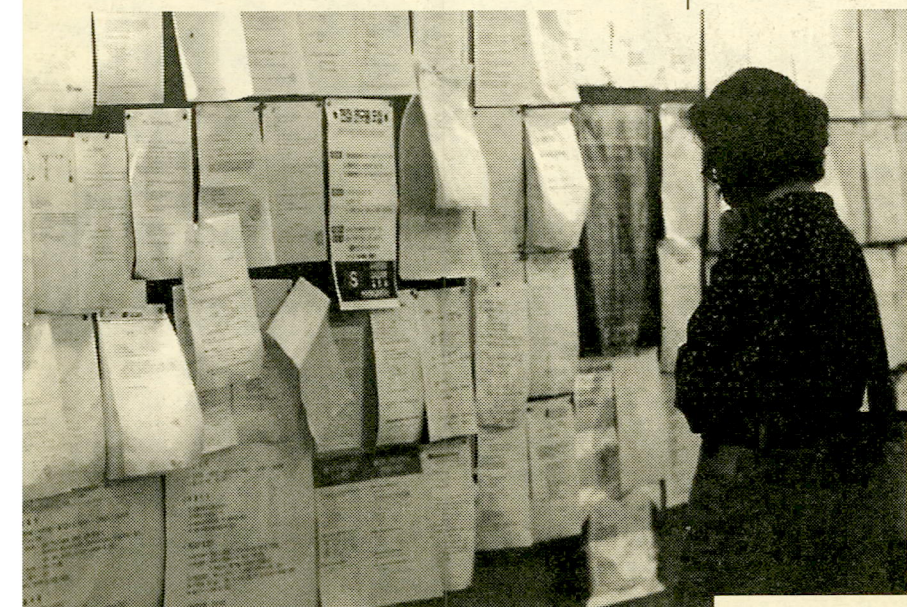
지난 8월 2일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대구 수성갑에서 현경자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12대 김정례, 김옥선 의원 이후 끊어진 지역구 여성의원의 대가 이어졌다. 남편 박철언 전 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출마했다는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현 의원은 당선 직후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현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교육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 뽑은

10대 뉴스

6 군복무가산제 부분 축소

현행에서 1~2% 낮추기로
 상해위 청원 이후 4개월 만에 결정돼



취업정보 읽기에 분주한 여대생들. 군복무가산제의 부분축소 조정으로 7급 공무원
 시험 여성합격률도 현행 4%에서 1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성들의 공무원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져온 군복무
 가산제가 현행보다 1-2% 하향 조정됐다. 지난 10월 14일 행정
 심의위원회는 제대군인에게 주고 있는 가산점을 6.7급의 경우
 1년 이상은 만점의 3%, 2년 미만은 1.5%, 8.9급 국가직의
 경우 2년 이상은 4%, 2년 미만은 2%로 축소하고 9급 지방직
 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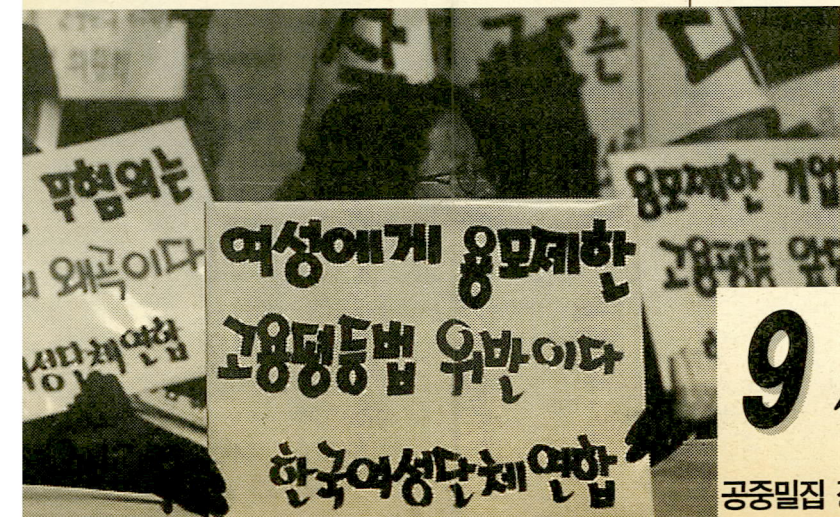
상해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말 이화여대 조택(행정학)
 교수 등 교수와 학생 1천9백31명이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폐지를 청원한 이래 주무부서인
 훈처와 중재로 나선 총무처, 그리고 여성계와 정부장관(제2)
 사이의 심각한 의견대립으로 다섯차례의 심의가 열리는 보
 드문 난항을 거듭하며 청원 4개월 만에 내려졌다.

이번 축소 조정은 완전폐지를 주장한 여성계의 의견이 충분
 수렴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으나 그간 징병제 하의 군필자
 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여겨져 왔던 가산제가 법적인
 근거 없이 차별이며, 향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는 사
 회적인식을 이끌어 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7 '용모차별 채용' 44개 기업 고발

상교육 파행 실태 드러나
 검찰 불기소처분 움직임 논란 일기도

'키 1미터 60센티 이상, 몸무게 50킬로그램 이하.'
 지난 5월 25일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 전교조(위



용모차별채용기업에 대해 무혐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계는 정당한 법 해석을 검
 측에 촉구했다. 한국 여성단체연합 등은 지난 15일 서울시 검찰청 앞에서 고발업체의 사업처리를 촉구하
 는 집회를 열었다.

원장 정해숙), 참교육 시민모임(사무처장 이정진) 관계자 33명
 은 고졸 여사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모와 키 등 신체조건을 채용기준으로 내세운 44개 기업체 대
 표들을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모집, 채용상의 차별 금지와 헌
 법 제11조 1항 국민의 평등권, 헌법 제32조 4항 근로의 권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이상의 채
 용기준이 살빼기, 키크는 체조 등 여고실업교육을 파행으로 치
 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를 계기로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
 모임'이 결성되고 전 여성계 차원으로 사
 건을 확대시킨 점은 이후 검찰의 결정에
 지속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6일 검찰에서 여성 고
 유 직종에서 용모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고용법 상의 차별, 고용과 채용에서의 평
 등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여여차
 별이라는 이유로 기소 결정을 유보시킬 것
 이라는 사실이 보도돼 여성계를 긴장시키
 기도 했다. 검찰의 법해석 여부에 따라 고
 평법의 법적인 실효성이 새롭게 제기될 수
 도 있어 법개정에 대한 여론도 거세어질
 전망이다.

8 1백10년만에 '여성목사' 길 트다

내년 봄 정기노회 3분의 2 찬성 얻어야 효력 발생

지난 9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기장총회
 사무처에 2명의 여성국장을 탄생시킨 것과 함께 예장통합은 12
 일 제79회 총회에서 여성안수 헌의안을 통과시켜 무려 1백10년
 만에 '여성목사'의 길을 여는 쾌거를 이룩했다. 여성안수 헌의



▲한국기독교사상 1백10년 만에 여성목사가 탄생하게 됐다. (사진은 여성안수 헌의안
 투표장면)

안은 당일 1천3백21명의 총대들이 참석, 찬성 7백1표로 극적으
 로 통과했다.

총회에서 통과된 여성안수 헌의안은 헌법개정위원회 보고에
 따라 목사는 30세 된 남자에서 30세 된 남녀로,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무흠입교인으로 7
 년을 경과한 30세 이상된 남녀로 자격을
 규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여성목사 탄생
 은 95년 봄에 열리는 51개 정기노회에서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
 하게 돼 1백10년만의 역사적 쾌거는 내년
 으로 유보되어 있는 셈이다.

9 성폭력특별법 시행에 돌입

공중밀집 장소 추행 3백만원 벌금, 친고죄 조항 여전

여성범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결의지가



▲4월부터 시행된 성폭력 특별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
 한 음란행위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해 성폭력의 근본적인 근절에 가깝게 접근했다
 는 평가를 받았다.

담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지 4개월만인 4월 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
 다.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근친강간의 경우 당사자의 신고없이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며, 장애인 강간에도 비친고죄를 적용해 시
 설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공
 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고소기간도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으로 연장했
 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누설 금지, 비공개 심
 리를 원칙으로 한 것도 눈에 띄는 항목이다.

그러나 대 여성범죄 중 악법으로 지적받아온 친고죄 조항은
 이번 성폭력특별법 시행령에도 그대로 살아 있어 풀어야 할 숙
 제로 남아 있다.

10 평등부부상 제정

생활 속의 평등 모델 제시
 세계 가정의 해 행사도 다채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 이를 기념해 건전가족
 세미나, 불우모자가정 및 재한외국인동기 자선음악회, 가족법
 정착을 위한 공청회, 모자가정 후원사업 등 다양한 행사가 마
 려됐다.

특히 올해 12월 제정된 '평등부부상'은 가정의 출발이 평등
 한 부부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본사
 와 정부장관실(제2실)이 공동주최하는 평등부부상은 의사결정,
 재산권, 가사분담, 육아, 취미 및 기타활동 부분으로 나뉘어 각
 부분에 한쌍씩 5쌍의 평등부부를 선정해 상패 및 부상을 수여
 한다.

평등부부상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수상자 결정은 자천 타천
 의 소정양식 응모서류를 통한 1차 심사와 현장에서의 인터뷰를
 통한 2차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지난 7월 정부장관실(제2실)에서 실시한 <평등부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는 대화 많이 하는 부부가 평등부부라는 조사결
 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가정학회 등 가족연구와 관련
 한 6개 학술 단체는 12월 19일 세계가정의 해를 마감하며 '공
 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세계가정의 해를 맞아 건전가족육성을 위한 각종 행사가 풍성했다.
 그 중 평등부부의 개념을 정립하고 평등부부상을 제정해 시대에 맞는 새 부부상을 제시
 한 것은 큰 수확이다. (사진은 지난 6월 16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개최한 '평등한 부부
 상'을 정립 간담회 모습)